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정재현



요즘 정치권이 '호남인사 소외' 논란으로 시끄럽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최근 제기한 호남인사 소외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박하자, 민주당이 다시 반론을 펴고 나선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헷갈릴 따름이다. 여당과 야당이 통계자료를 들이대며 "호남 소외다", "아니다"고 갑론을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건 누군가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논속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똑같은 사안에 대해 이런 정반대의 시각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끼워 넣기' 호남출신 인사

10일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호남인사 소외론'의 실제(實體)를 엿볼 수 있다. 현 검사장급 54명의 출신지역은 영남이 25명이다. 반면 호남출신은 8명으로 영남의 3분의 1도 못된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호남 출신의 소외는 두드러진다. 핵심요직인 소위 '빅 4'에 TK 출신이 2명인데 반해 호남은 전무했다. 9명의 고검장급에서도 호남출신은 법무차관이 유일하다. 주

요 보직 어디에도 호남출신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출신지역 등을 적절히 안배한 균형인사"라고 자평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

웃고 왔다 울고 가는 고향

은 이럴 때 쓰라고 생긴 모양이다. MB 정부 들어 호남출신은 구색을 맞추기 위한 '끼워 넣기'로 전락한 인사가 어디 검찰만 일일겠는가. '호남인사 차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정권 때마다 불거지는 단골메뉴다. 60~70년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호남인사 차별은 5, 6공을 거치면서 극에 달했다.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역시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호남인사 소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호남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손해를 보는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DJ와 노무현이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이나"

는 지역민의 불만이 쏟아졌겠는가. 호남인사 차별은 결국 망국병으로 불리는 지역감정의 씨앗이 됐다. 왜 호남인은 항상 능력이 아닌 출신지역 때문에 피해를 보아야만 하는가. 물론 이는 정권을 잡고, 유지하는데 '호남 배제'를 이용한 군사정권에 그 뿌리가 있다 하겠다. 정통성도, 민주적 기반도 없었던 박정희 정권과 5, 6공은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이용했고 '호남 배제'를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외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분명 지

지역인재 키울 토양 시급

역 내부의 문제도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지역인재에 대한 지역민의 무관심과 출대도 일정부분 작용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아시아의 물결' 조오련이 해남 고향 집에서 외롭게 타계했다. 그는 70년과 74년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자유형 400·1500m를 2연패 했다. 이는 박태환의 올림픽 금메달에 비견될 패가였다. 그는 은퇴 후에도 두 번의 대한해협 횡단, 한강 600리 수영 완주 등 끊임없는 도전으로 한국인의 기상을 과시했다. 특히 2005년에는 두 아들과 함께 울릉도~독도 간 93km를 횡단하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온몸으로 입증해 보였다. 조오련은 분명 자랑

스런 한국인이자 '전라도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에게 조오련은 잊혀진 '과거 사람'에 불과했다. 지금쯤 지역에 그의 이름을 딴 '조오련 수영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당연하다. 그래서 그의 업적과 도전정신을 기리고 제 2, 제 3의 조오련을 키워야 했다. 현실은 이런 생각 자체가 사치스러울 정도다. 대부분의 지역민은 그가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으니까.

지역인재 키울 토양 시급

연제부터인가 지역에서는 "타지 출신 기관장은 웃고 왔다 울면서 간다"는 말이 회자 되고 있다. 지역 여론을 조정하고 지역의 의지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어른'이 없다고 한탄한다. 호남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중앙에서 클 수 없다고 불평 불만이다. 이는 사람을 키우지 않고 보호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의 잘못은 없는지 헤아려보자는 얘기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고 하지 않은가. 지역발전도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지역이 앞장서 역량 있는 인물을 발굴하고, 잘 키워서 보호해야 하는 이유다. 인물이 나고 클 수 있는 토양부터 만들어야 한다. '호남 푸대접' 타령만 해선 지역에 희망이 없다. <논설실장>

시설

DJ·YS 화해 국민통합 계기로 삼아야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와병 중인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찾아 '화해'를 전격 선언했다. DJ의 위중 한 병세로 인해 두 손을 굳게 잡는 모습까지는 볼 수 없었으나, 우리 정치사의 한 장을 정리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0년 한국 정치의 이끈 두 거목의 화해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감회는 남다른 수밖에 없다. 양김(兩金)은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면서 아울러 군사정권 시절 반독재투쟁을 이끌며 민주화의 꽃을 피웠고, 훗날 군부통치를 종식시키고 국민에게 민주화의 결실을 안겨줬다. 특히 두 사람은 군사정권의 호남차별로 깊은 좌절감에 빠진 지역민의 희망을 되찾아 준 인물로 평가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그동안의 앙금을 씻고 화해를 한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보나 지역의 장래를 위해서도 잘한 일이다. DJ와 YS는 한국 근·현대사의 기적 중의 하나인 민주화를 이끌어 낸 공(功)이 있는 반면 지역 분파적, 정파적 갈등

구조를 고착화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과(過)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양김의 화해의 상징성이다. 최근 지역 갈등과 지역 패권이란 단어가 정치의 전면(前面)에 다시 등장하고 보수·진보 세력의 극단적 대결은 지역분열 못지 않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두 사람의 화해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화해를 향한 양김의 노력이 지역 화합, 국민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양김의 이번 화해가 두 정치세력 간의 화해를 넘어서서 아직도 지역 간의 단결과 대립의 두터운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가 더 큰 통합으로 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 지도자는 물론 국민들도 DJ와 YS의 화해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 지역화합, 국민통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법정 자본금 확보 J프로젝트 가속도 불나

전남의 최대 현안사업인 서남해안관광단지(J프로젝트)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J프로젝트 사업 지구 6곳 중 한 곳인 '삼호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출자회사들의 법정 자본금 450억원 납입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2025년까지 영암 삼호읍 인근 간척지 9.2㎢ 일대에 허브·골프·문화·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삼호지구는 지난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특수목적법인(SPC) 주관사인 금호산업이 자본금을 내지 못해 정부 승인 최종단계인 국무총리실 기업도시위원회(기도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법정 자본금이 확보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J프로젝트 사업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21일 삼호지구 개발계획안을 기도위에 상정할 계획이며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 완료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뜨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J프로젝트가 순항하기 위해

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조속히 구는 간척지 양수·양도 문제 등으로 사업이 늦게 됐다. J프로젝트 사업 지구 6곳 중 한 곳인 '삼호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출자회사들의 법정 자본금 450억원 납입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2025년까지 영암 삼호읍 인근 간척지 9.2㎢ 일대에 허브·골프·문화·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삼호지구는 지난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특수목적법인(SPC) 주관사인 금호산업이 자본금을 내지 못해 정부 승인 최종단계인 국무총리실 기업도시위원회(기도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법정 자본금이 확보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J프로젝트 사업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21일 삼호지구 개발계획안을 기도위에 상정할 계획이며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 완료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뜨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J프로젝트가 순항하기 위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클럽

최영태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상대적 괴리를 우리의 삶 곳곳에서 부정적 영향을 확대·심화시켜가고 있다. 수도권에 집값 폭등으로 지방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린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모순에 대한 시정은 커녕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더 벌어놓을 정책의 시행에 앞장서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와 여기서 거론하려고 하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그 대표

도 타격을 가할 것이다. 전남대와 부산대 등 지역의 주요 거점 국립대학들이 연구력에서 전국 10위 내외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는 국립대에 주어지던 여러 가지 특전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만약 국립대 법인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특전들은 점차 사라질 것이고, 이와 함께 이들 대학들의 연구력도 쇠퇴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법인화가 시행되면 대학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경영의 효율성을 기

국립대 법인화가 가져 올 파장

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립대학들 대부분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결국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지방대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대학을 법인화할 경우 당장 일어날 현상 중 하나는 등록금의 큰 폭 인상이다. 국립대 체제하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유혹이 클진대 법인화가 된다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은 자명한 현상 아니겠는가. 지금 국립대 다니는 학생들만도 수는 생활보호 내지 차상위 생활보호대상자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인화된 대학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국립대 체제하에서나 대학 진학이 가능한 수험생들은 아예 대학 진학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생활에 조금 여유가 있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국립대 프리미엄이 없어진 이상 지방대 대신 수도권 대학 진학에 대한 유혹을 더욱 크게 받을 것이다. 결국 지방대학은 텅텅 비고 수도권 대학 진학을 둘러싼 입시지옥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 국립대 법인화는 지역 성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의 연구력에

대 타격을 가할 것이다. 전남대와 부산대 등 지역의 주요 거점 국립대학들이 연구력에서 전국 10위 내외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는 국립대에 주어지던 여러 가지 특전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만약 국립대 법인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특전들은 점차 사라질 것이고, 이와 함께 이들 대학들의 연구력도 쇠퇴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법인화가 시행되면 대학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경영의 효율성을 기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허위 정보로 고객 속이는 부동산 중개업체 철퇴를

최근 이사를 하기로 하고 좀 큰 집을 구하려 다녔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러 매물과 실거래 되는 매도의 가격과 확인하고 돌아왔다. 더 자세한 매물거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시세전문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더니 조금 전 들렀던 중개업소 거래가 격보다 무려 2천만원 정도 안 가격에 매물이 나와 있었다. 서둘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달려갔다.

그러나 도착한 그 중개업소 말이 실제로는 4천만 원이나 비싼 가격으로 물건이 나와 있다는 것이었다. 너무 화가나 왜 이런 식으로 농락하느냐고 따졌더니 원래 부동산 매물값을 다운시켜서 올려놓는 게 관례라는 것이었다. 딱딱처럼 매수자의 관심을 끈 다음 집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편법적 행동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미·광주시 서구 양동

기고

윤영주



전남도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농가인구 비율과 산업의 농업 집중도 역시 가장 높아 농업특화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지역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2002년부터 7년 동안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개최해 왔다. 이를 토대로 세계시장을 겨냥한 2012 국제농업박람회 개최를 위해 지난 2009년 6월 23일 정부로부터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공익적 국제행사도 승인받아 박

는 수출박람회 모델로 정형화해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2012 국제농업박람회는 국제규모의 행사인 만큼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주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조직, 관련시설물설치, 전시·연출, 홍보, 주제관광 및 조형물, 조경 및 관람객의 눈높이를 생각하는 편의시설 등 각 분야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협

2012 국제농업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람회 추진 조례제정, 제단법인설립추진, 조직위원회 및 사무국설치준비, 세부실행계획수립, 전시·행사 프로그램 개발, 외국수출관련단체와 협의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 국제농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한국과 한국 농업, 한국농업인, 한국의 농촌을 세계에 알리고 그 특·장점을 적절히 홍보할 수 있다면 이는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물론 한국농업과 농촌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농업생산기술은 비록 최고수준은 아니지만 과일 및 신선채소, 화훼류의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농업용 자재의 우수성도 높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2012 국제농업박람회는 한국의 농산물과 농촌의 특성을 전 세계에 알릴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2012년 농림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전론 유리운실단지 조성, 수출업체의 조직화·규모화, 주요핵심 수출품목의 집중 육성 등 핵심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2 국제농업박람회는 생산현장에서 개최하

조례제는 물론 유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와의 국제행사 협력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고, 농진청, 산림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업관련 기관은 물론 각종단체(무역진흥공사, 관광공사, 농식품 수출기업 등)와의 구체적인 협조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람회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어쩌면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주도로 정부 예산으로 치러져야 할 국가적임 국제농업박람회를 위해 전남도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그동안 대한민국박람회 개최 노하우를 축적해 국제행사로 추진하는 만큼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의 지원은 반드시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여건과 협력체제를 갖춘다면 2012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해 농업의 전후방산업인 식품산업, 농자재, 농촌관광 등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할 수 있으며, 전남지역의 SOC와 음식, 숙박 등 관광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전남농업기술원 박람회추진기획단·행정학박사>

학교 엘리트 체육 육성 비난 할 것만은 아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학생체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부는 안 하고 운동만 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엘리트체육 육성보다 "공부하는 학생 선수 양성을 위해 학원 스포츠의 진로를 바꾸는 게 좋다"고 말한다. 구체적 대안은 축구를 시범종목으로 선정하여 학기 중 전국 규모의 대회 폐지·초등학교 합숙 훈련 규제·지역별 리그제를 도입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연말에 왕중왕 대회를 개최하는 식으로 학교 체육 방식 변화를 꾀해보자는 것이다. ▲송희수·나주시 송촌동

물론 그게 틀리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박태환 선수가 세계대회에 나가 예선 탈락해 전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실망했다. 또 김연아 선수도 응원하며 좋은 성적을 내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공동체 의식과 민족적 정서 탓이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교실에서 공부하다 남은 시간에 훈련을 했다더라면 그런 성적을 낼 수 있을까? 그들은 국·영·수에 쏟을 열정을 체육에 쏟는 것이다. 학교체육의 변화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옳다고 본다. ▲송희수·나주시 송촌동

無等鼓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었던 영화 '괴물'이나 거미의 '프릭스'는 관객들을 공포로 밀어넣지만 하는 단순한 스릴러물로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둘 다 돌연변이 현상을 일으킨 주범으로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메시지를 행간에 담고 있는 작품들이다. 최근 해파리떼의 습격으로 연일 시끄러운 서남해안은 영화 속 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결 지름이 1m 크기에 독성이 강하기로 소문난 노무라입깃 해파리라는 놈은 것새 유류와 갑각류를 마구 먹어치우는 바람에 어장지도를 제멋대로 바꿔놓았다. 또 사람까지 공격해 호흡곤란과 근육마비를 일으켜 해수욕장을 온통 망가뜨리기도 한다. 해파리 떼로 인해 그물이 찢기고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면서 어업손실만 해도 연간 수천 억 원이 넘는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농들이 병각수 취수구를 덮쳐 가운데까지 발생하는 잿이 골머리를 앓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처럼 수년 새에 해파리떼가 급증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의 상승, 육지에서 흘러보낸 오염물질로 인한 부(富)영양화, 해파리의 천적 물고기 남획 등을 꼽는다. 인간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인간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서두에 거론한 영화의 내용이나 다를 바 없다. 해파리의 왕성한 번식력과 번식력이지만, 이를 없앨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천적인 쥐치의 치어를 방류한다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해파리 개체수를 감당할 수 없을뿐더러, 화학 물질을 살포하면 다른 어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어쨌거나 해파리 개체수 급증에 대한 주범이 인간이고 보면, 그에 따른 퇴치 방법이나 피해어민들에 대한 지원도 인간의 몫일 수밖에 없다. 대처가 늦으면 발전소의 경우 농들이 병각수 취수구를 덮쳐 가운데까지 발생하는 잿이 골머리를 앓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처럼 수년 새에 해파리떼가 급증한

해파리떼의 습격



이처럼 수년 새에 해파리떼가 급증한 /J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건부 2200-691	
사회 1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조사부 2200-571	
(F A 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